

99개 구역서 도전장... 분당 동의율 90%, 산본 78% 그쳐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035년 인구 125만명 도시 계획 15.3만호 신청... 예정규모의 6배 분당 67곳 중 47곳서 공모 참여 일산은 22곳서 신청, 동의율 84% 지자체 협의 후 내달 중 최종선정

1980년대 들어서기 시작한 1기 신도시가 10년 뒤에는 인구 125만명의 도시로 탈바꿈한다.

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청이 마무리된 가운데 신도시별로 표정은 엇갈렸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 전체 대상 단지의 70% 이상이 선도지구에도 전장을 내밀며 평균 동의율도 90%를 넘겼지만 산본은 동의율이 77%에 그쳤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세대, 인구 현황 및 계획>

/자료=국토교통부

	합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최초 조성 세대수, 만호	29.2	9.7	6.9	4.2	4.2	4.1
계획인구 수, 만명	116.8	39.0	27.6	16.8	16.8	16.6
현재 세대수('22년 기준)	39.2	13.7	10.4	5.1	4.2	5.8
인구 수	95.4	33.2	24.1	13.1	11.0	14.0
'35년 목표 세대수	53.7	19.7	13.1	6.9	5.8	8.2
인구 수	124.2	45.2	30.3	16.3	14.3	18.1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총 99개 구역으로 집계됐다. 총 15만3000호 규모로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2만6000호 대비 6배에 달했다.

분당은 대상이었던 67곳 중 양지마을, 시범단지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당초 선정 규모인 8000호보다 7배 이상 많은 5만9000호 규모다. 평균 동의율도 90.7%로 높았다.

일산은 47곳 중 22곳이 신청했으며,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은 19곳 중 9곳이 공모에 참여했고, 평균 동의율은 86.4%로 일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동과 산본의 접수구역 평균 동의율은 각각 80.9%, 77.6%에 그쳤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중으로 최종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막판에 변수로 떠올랐던 공공기여 계획에 대해서는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민간 정비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특별정비구역내의 공공기여금 총액 산정과 함께 총액 내 토지 제공, 기반시설 설치, 현금 납부 등 기여 방식별 인정금액 산정 방안 등을 설명한 바 있다.

오는 2035년까지 1기 신도시 5곳의 청사진은 총 53만7000호 규모, 인구 124만2000명의 도시다.

당초 1980년대 후반 수도권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조성된 1기 신도시 1996년까지 29만2000호 규모로 조성됐으며, 현재는 39만2000호 규모로 성장한 상태다.

지난달 일산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공개되면서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안은 모두 공개됐다. ▲다시 도약하는 분당신도시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 ▲지속가능한 미

래 도시 평촌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라이즈업(RISE-UP) 산본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은 중동 등이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2030년 이후에는 1기 신도시가 처음 기획됐던 1980년대와 인구나 가구 환경이 달라진 다"며 "자칫 기존의 신도시 개념에 갇혀 자동차, 고층 중심의 상업시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현 도시 모델로 재정의된다면 거주하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 새로운 신도시는 고령화와 1인가구에 중점을 둔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는 줄지만 전체 가구수는 2022년 2166만에서 2041년 2437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1인 가구 비중은 2022년 34%에서 2041년에는 41%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생산가능인구 5년새 180만명 줄었다

행안부, 8월말 기준 총 3566만명 생산가능인구 비중 72.2%→69.6%

전국 생산가능인구가 지난 5년 사이 18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한 해 평균 35만 명씩 줄어든 것이다. 총인구에서 이들 일할 나이대의 국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대 초중반께 사상 최대에 달했으나 이제 1980년대 수준으로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다.

1일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 8월 말 기준 3566만 명으로, 그보다 불과 1개월 전에 비해서도 3만 명 줄었다. 1년 전인 2023년 8월(3606만 명) 대비로는 40만 명 적었다.

2019년 8월(3743만 명)과 비교하면 177만 명(-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간의 감소분이 광주(141만), 대전(143만), 강원(152만), 충

북(159만) 등의 인구를 넘어섰다.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2019년 8월 72.2%에서 올해 8월 69.6%까지 작아졌다. 이는 지난 1990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들의 비중은 정점(73.4%)을 찍은 2011년 10월~2012년 1월 기간에 비해 3.8%포인트(p) 쪼그라들었다.

이들의 비중 하락 추세는 2019년 12월 시작된 총인구 감소를 비롯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급증, 합계출산율 하락 등이 한데 맞물려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15년 전인 2009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0.5%(520만 명)에 그쳤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4년 8월 644만 명까지 증가했고 비중도 12.6%로 늘어났다.

다시 5년이 흐른 2019년 8월에는 노인인구가 789만 명(15.2%)까지 증가했다. 2024년 8월 기준 노인인구와 비

중은 1006만 명, 19.6%로 각각 역대 최대 및 최대를 기록했다. 고령층 수는 불과 15년 만에 486만 명 늘어난 데다 비중도 감절 가까이 커졌다. 반면, 지난 15년간 총인구는 157만 명 느는데 그쳤다. 총인구는 2009년 8월(4968만 명) 이후에도 완만히 증가했으나, 2019년 11월(5185만 명) 역사상 정점에 도달한 이래 올해 8월 5125만 명까지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청년 인턴들간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국민 1000명·전문가 3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대내 위험요인에 국민의 55.8%와 전문가의 62.8%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꼽아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 조성에 역량 집중"

김병환 금융위원장 부산 방문, 플라이 아시아 행사 참석 우수 스타트업에 금융위원장 상 수여

"지역산업 특화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산업은행이 부산이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1일 부산을 방문해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현장을 살펴보고, 플라이 아시아(Fly Asia)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은 부산항 북항 부지에 조성하는 창업·문화 전시 복합 랜드마크 공간으로 민간 주도의 창업보육 및 남부권의 청년창업 선도를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은 2026 개관 예정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스타트업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며 "2026년 상반기 개관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유관기관과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 역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Fly Asia 2024에 참여해 청년 창업인을 격려했다. Fly Asia는 부산시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아시아로 확장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다. 김 위원장은 Fly Asia의 일환으로 개최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디캠프·D-camp) 디데이 스타트업 피칭 대회 시상식에 참여해 우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금융위원장상을 수여했다.

수상기업은 D-camp 입주 및 최대 3억원의 직접투자가 이뤄진다. 또 협력기관을 통해 투자기회가 주어지고, 보육프로그램 신청서 서류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 위원장은 KDB 브이런치(V:launch)에 참석해 "지역의 벤처기업 육성은 경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매우 의미있는 과제"라며 "KDB V:launch가 활발하게 개최돼 동남권 지역 특화 대표 벤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고, 산업은행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며 "지역산업 특화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앞으로도 국정 과제인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이행하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학교 급식 조리원 산재 5년간 6500건

김문수 의원, 대책마련 주문

학교 급식 조리원 산재가 매년 급증해 5년간 6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업무량이 원인으로 꼽히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가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6446건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발생 건수는 ▲2020년 729건 ▲2021년 1202건 ▲2023년 1794건이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124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중 유형별로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지난달 24~28일까지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협력을 통해 도내 13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합동점검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 급식센터에 대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충남교육청

는 ▲화상 1669건 ▲넘어짐 1533건 ▲근골격계질환 820건 ▲물체에 맞음 430건 ▲끼임 422건 ▲절단·베임·찰림 373건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234건 ▲폐암 93건 등이 있다.

시도별로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1월부터 8월 말 기준 경기도가 4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28건 ▲인천 124건 ▲서울 82건 ▲충남 77건이 그 뒤

를 이었다. 세종은 10건으로 산재가 가장 적었다.

조리종사자 산재에 각 시도 교육청들은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조리여건 개선,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 하향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산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현진 기자 lhj@

"4분기, 유망품목 중심 수출지원 총력"

>> 1면 '반도체 율령...'서 계속

정부는 4분기에 수출 증가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쿄 한류박람회(10.11~13)', '수출붐업 코리아(10.22~23)' 등 대규모 수출전시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수출 잠재력이 높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현장 지원단을 집중 가동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안 장관은 아울러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확실성, 미국 등부 항만 파업(현지시간 10월1일 예정) 등 수출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상황 발생시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을 중심으로 대체 물류선 확보, 피해 기업 유동성 지원 등 비상계획을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